



#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

박원곤(이화여대)

# 정상회담 총평

- 미국과 가치·규범·제도 공유
  -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에 사실상 동참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불변
  -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 바이든 행정부의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우선 주의가 결합한 결과

# 정상회담 성과

## ■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

- 미일 공동성명: 14,139자 vs. 한미 17,624자
- 미일 공동성명 설명자료 9,199 vs. 한미 설명자료 16,521자

## ■ 대중 견제

- 한미간 차이점을 명시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
- 그러나, 가장 전향적인 중국 견제 내용 포함
  -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인정,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해 자유 항행 및 통행,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인권 및 법치 증진
  - WHO 투명성과 독립성 증진, 코로나 19 발병의 기원 조사 지원

# 정상회담 성과: 기술협력

## 1. 첨단 정보통신 기술 협력

-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
-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 "Beyond 5G" ))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
  - 미국 25억불, 한국 10억불 투자
  -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
  - cf) 미일의 "글로벌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 "
- 기술 표준 구축에 동참
  - 바이든, "세계 기술 표준을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선도"
  - 가치 지향적 기술 경쟁: 기술 민주주의 vs. 기술 권위주의
  - 한국의 산업 경쟁력

# 정상회담 성과: 기술협력

## 2.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

- 미국의 4대 품목 공급망 재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 한국 4대 기업의 44조 투자
  - 공급망 조정에 사실상 동참 효과
  -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및 장비 분야의 원천 기술 보유
  - 공급망 조정은 단기간내 성취 불가능,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 정상회담: 북핵 문제

- 외교에 방점을 둔 최대한 전향적 입장 표출: 한국 정부의 입장 수용
  -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 유엔 '제재' 결의가 아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해제 우회로 근거 마련
    - 승계 vs. 인정
  - 미 국무부 인권특사에 선행하여 대북정책특별 대표 임명
- 그러나 대부분이 상징적인 수사, 구체적 양보 부재
  -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 선 철회 거부
  - 대화 재개 방식 구체화 부재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 (공동성명)
  -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통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위협" (바이든, 기자회견)

# 정상회담: 미사일 지침 폐지

## 한미 미사일 지침 변화

연월	내용	사거리	탄두 중량
1979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180km	500kg
2001년 1월	1차 개정(김대중 정부)	300km	500kg
2012년 10월	2차 개정(이명박 정부)	800km	500kg
2017년 11월	3차 개정(문재인 정부)	800km	무제한
2020년 7월	4차 개정(문재인 정부)	우주발사체에 대한 <b>고체연료 사용</b> 제한 해제	



## 한국 주요 미사일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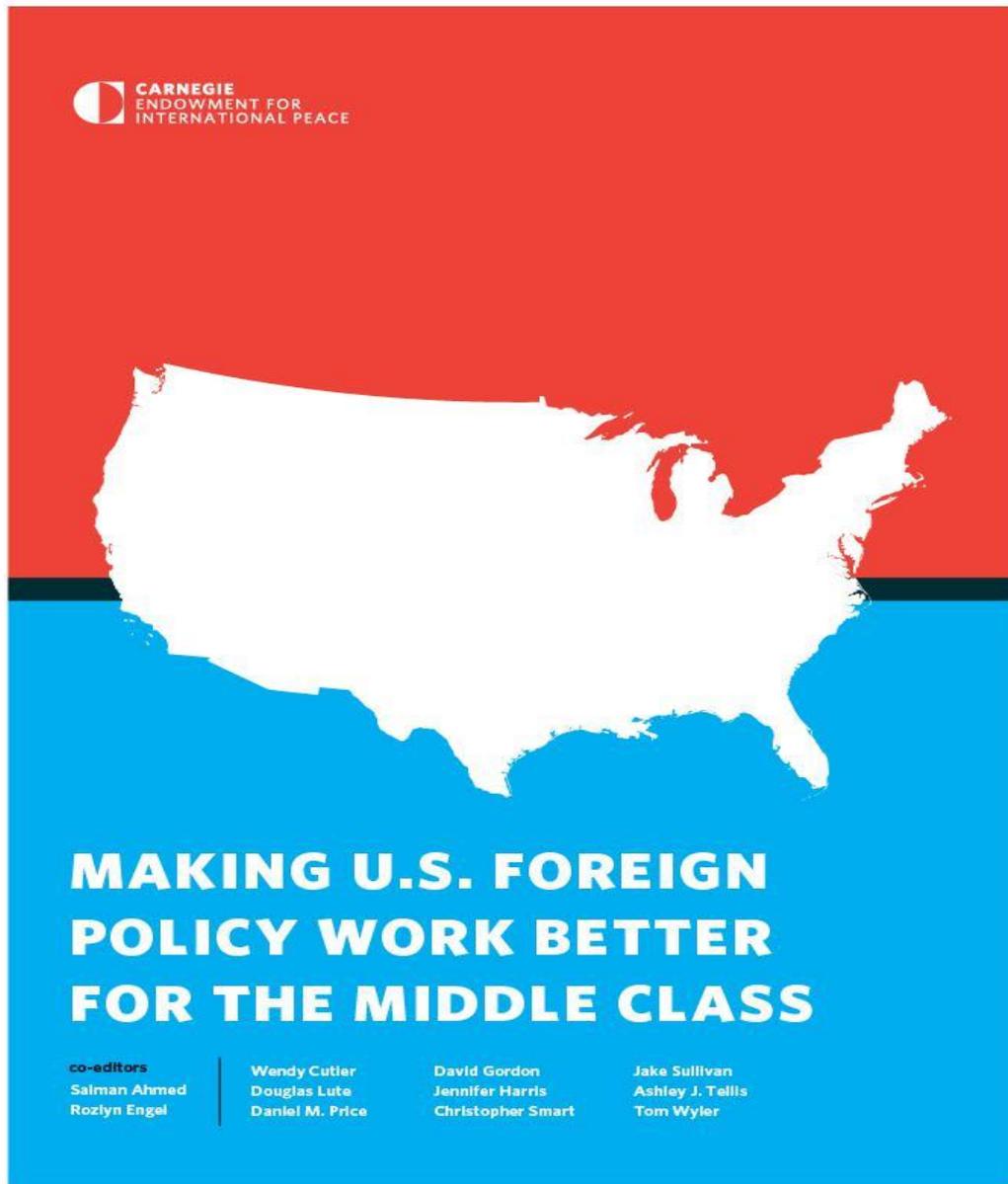
한반도 중부전선 중심기준



반종빈, 장예진 기자 / 2021052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 한미정상회담 동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복합 대중정책

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재건을 통한 “정당성” 확보
  - 기존질서 옹호: 항행의 자유, 공정한 주권, 투명성, 평화적 분쟁 해결, 계약 존중, 국가간 무역, 초국가 도전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 달성
  - 중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 영토 모험주의와 경제 강압
  - 규칙에 기반한 질서, 민주주의 가치 등을 통한 정당성 강조
2. 동맹체제 복원을 통해 역내 “세력균형” 우위 달성
  - 역내 국가의 “비대칭적 능력” 강화, 군사·정보 협력체 구축
    - 전투 능력을 배가시키는 “전력승수” (force multipliers) 효과 추구(블링컨, 오스틴, 2021.315)
    - 역내 미 동맹·우호국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징과 이점을 살려 협력을 강화, 규모에 상관없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세력균형 달성

# 바이든 행정부의 복합 대중정책

## 3. 자유주의 연대의 다면적 재건축: “비스포크 혹은 방편적” 접근

- 기존 체제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여 작동 체제를 정상화하는 재건축 추진
- 유연하고 혁신적인 동반자 체제를 구축
  - 모든 의제를 망라하는 거대 협력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의제별 맞춤형 협의체 설립: 실질적, 기능적, 영역 친화적, 비공식적 접근
  - 동맹 및 우호국과의 ‘지분 나누기’
  - 예) 쿼드, 미일 및 한미 협력

# 한미정상회담에 접목

-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 미국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반하는 중국의 태도를 문제시
  - 한국이 거부하기 힘든 명분
  - 대북정책에서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양보도 작동
- 세력균형
  -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역내 역할을 요청, 한국은 일정 수준 인정 불가피
- 비스포크(맞춤형) 접근
  - 한국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이동통신,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공급망 재편 요청

# 한미정상회담 과제

- 미중 간 경쟁은 지구적 리더십 확보에 의해 결정
  - 미중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정당성 문제의 해결 능력이 관건
  - 미국은 민주주의 표본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의 우위 확보가 가능
  - 반면 중국은 구조적 한계 상존
    - 근본적 자유 부재의 권위주의 체제는 세계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 획득 불가능
-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시효 소멸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이익의 균형추를 합리적으로 판단
-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 vs. 미국의 제재 유지(JCPOA)



감사합니다.